

# 현안과 과제

|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

## Executive Summary

### □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

#### 1. 가계부채 급증과 우려감 확대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치 기록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의 높은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와 부동산 등 경제정책 결정에 부담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 2. 가계부채 위험 증가

먼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속에서 체감경기가 약화되고, 가계의 소득분배 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 속에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약화 현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및 상환압력 등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원금상환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가파른 물가 오름세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기관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한 금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로 맞추라는 창구지도 등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셋째, 주택시장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준공 후' 미분양과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해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3. 가계빚 복합불황 가능성과 정책 과제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잠재적 부실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저축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고,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높아진 가계부채 상태 하에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負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개인파산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소득·저신용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은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환경변화에 따라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제2금융권이 촉발하는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과 비슷한 가계부채 發복합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5.5%)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이며,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위기를 경험한 스웨덴의 경우 위기 직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한국 수준보다 낮은 134%였다.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 發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은 인위적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물이 틀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2금융권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비자보호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고용의 증가가 중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도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회수할 경우 '외수의 딜레마' 게임에 의해 결국 금융기관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가계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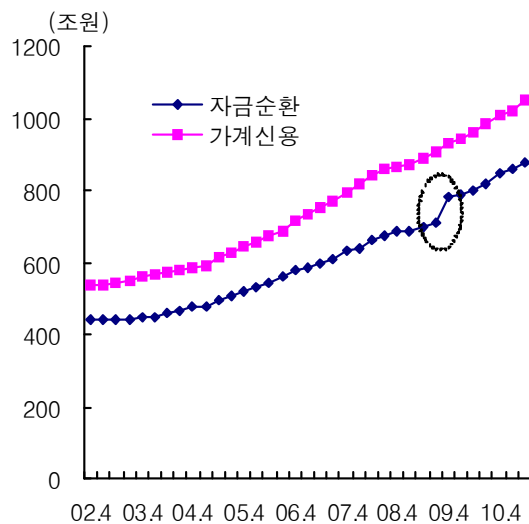
## 1. 가계부채 급증과 우려감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치 기록을 거듭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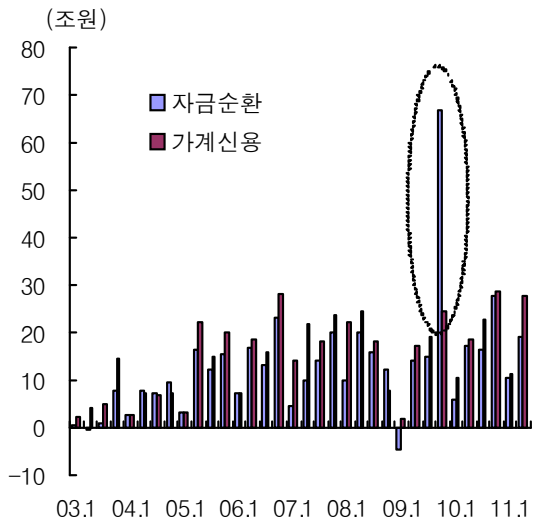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과 자금순환상의 개인부채(가계신용에다 자영업자 및 비영리단체 부채 등을 포함)를 사용)
  - 2011년 2분기 前분기 대비 가계신용 기준으로 18.9조원, 자금순환 개인부채 기준으로 27.6조원 증가

-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거듭
  - 2011년 2분기 말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876.3조원을 돌파하고,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기준으로는 1,050.1조원을 기록
  -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세는 명목GDP성장률 5.9%를 훨씬 상회하는 8.0% 수준을 지속

< 국내 가계부채 추이 >



< 가계부채 분기별 증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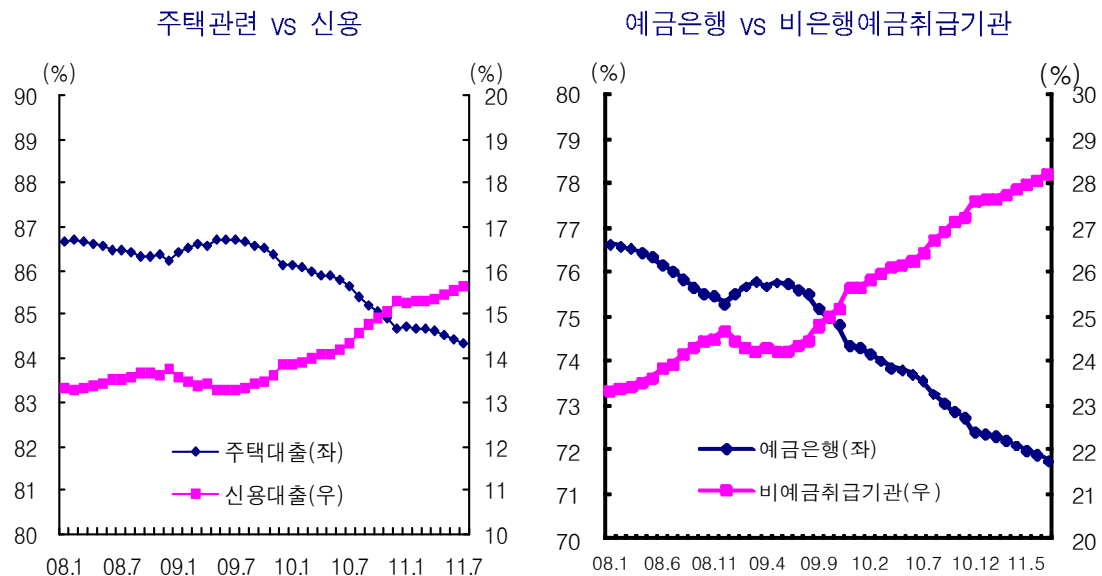
주 : 2011년 2분기 중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수정하면서 가계신용에 그동안 빠져왔던 통계치가 합산되면서 불연속한(점퍼)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1) 자금순환통계의 「개인부문」 부채와 가계신용통계의 「개인」 과 「가계」 라는 용어가 서로 비슷한 데다 부채금액은 포괄범위 차이 등으로 서로 상이하여 통계이용자들에게 혼선이 있었으나 통계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계부채규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계신용통계를 개선

○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극도의 금융위기 혼란에서 벗어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sup>2)</sup>
  -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6월말 현재 86.7%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84.3%로 하락
  - 반면 신용대출의 비중이 2009년 6월말 현재 13.3%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15.7% 수준으로 상승
- 그동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예금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sup>3)</sup>
  -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당시 일시 증가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반전되면서 2011년 7월말 현재 72% 수준을 기록
  -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일시 하락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반전되면서 2011년 7월말 현재 28%대로 상승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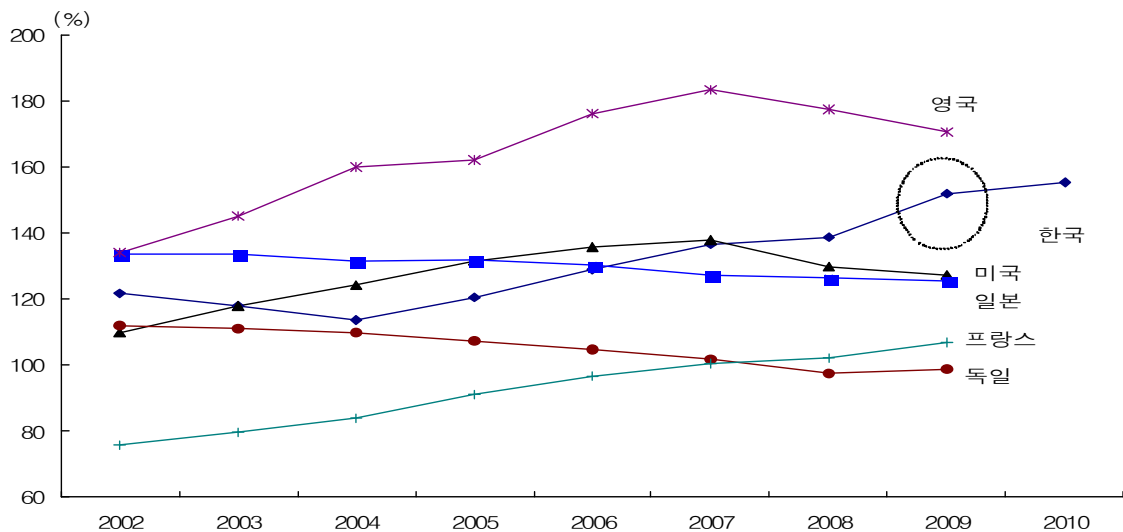
2) 주택관련 이외의 대출에는 순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상 '신용대출'이라 총칭함

3) 非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을 포함

○ 국내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에 육박하면서 우려감이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개인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
- 금융위기 이후 하향 조정 추세를 보이는 주요국과 달리 빠른 상승세 지속
- 2010년 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sup>4)</sup>

< 주요국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및 OECD

주 : 한국의 경우 2009년 이전 자료의 한계로 가계신용 통계 수정前 자료를 사용하였고, 2009년 부터 수정된 자료임

-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와 부동산 등 경제정책 결정에 부담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가계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상승, 주택시장 불안 등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무디스社 등 외국기관들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도 지난 6월말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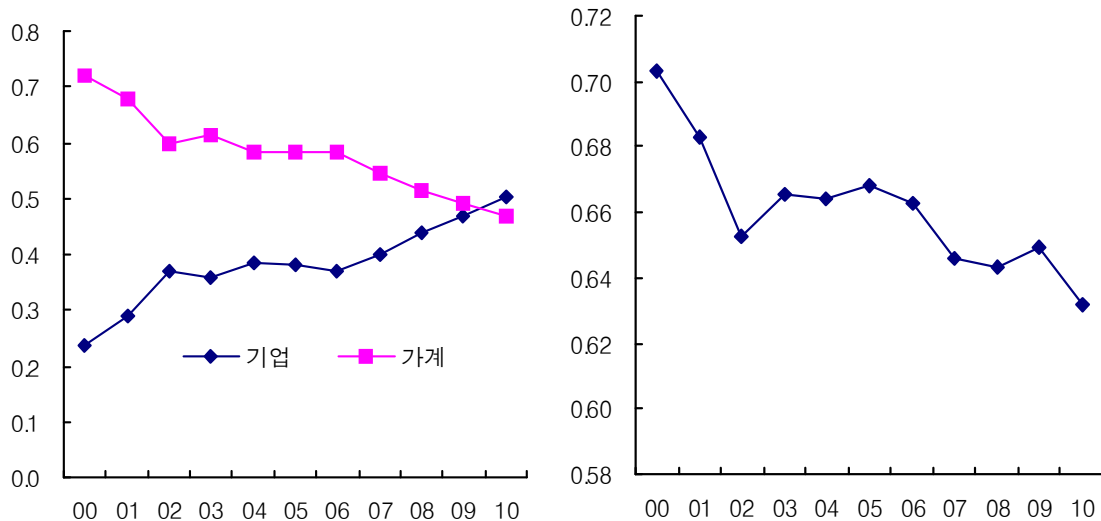
4) 2011년 국내 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가계부채를 자금순환 개인 부채로 계산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186% 수준으로 계산

## 2. 가계부채 위험 증가

○ (가계 소득 약화)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속에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가계의 소득배분 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2012년 국내 경제는 4%이하의 성장률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체감경기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sup>5)</sup>
  - 아직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미국 이외 선진국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글로벌 더블딥(double-dip; 이중 경기침체)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저하에다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에 따른 소득상승의 가계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요소국민소득의 '기업및재산소득' 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비중과 달리 개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기업및재산소득 중 개인 비중 추이> <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개인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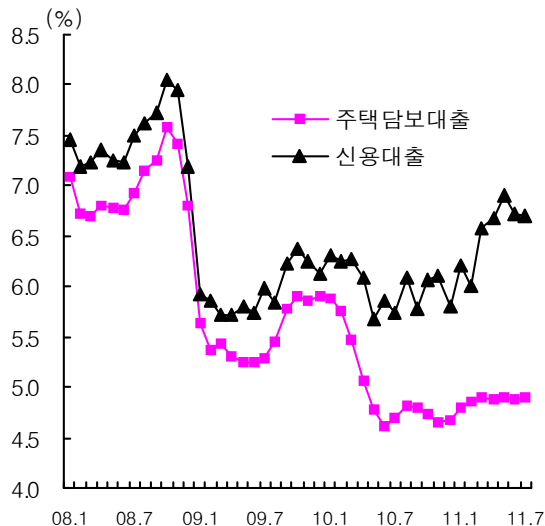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5)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아짐으로써 체감 경기 회복 미흡(GDP 증가율은 1/4분기 4.2%, 2/4분기 3.4%인데 비해 GNI 증가율은 2011년 1/4분기 1.8%, 2/4분기 0.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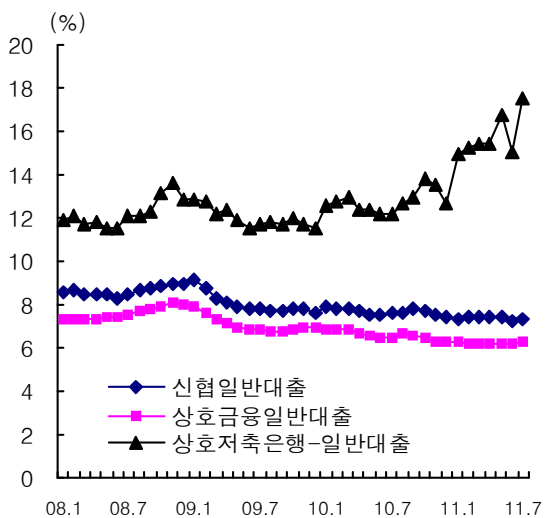
○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및 상환압력 등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원금상환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가파른 물가오름세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며,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승세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약 77%를 차지하는 주택대출은 변동금리형 단기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가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최근 들어 예금은행 가계 신용대출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非은행 예금취급기관 중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

<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



< 非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리 >



자료 : 한국은행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로 맞추라는 창구지도 등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금상환 부담이 증가
-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 대출금부터 갚도록 하고, 대신 당초 약정한 만기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특별 예대 상계를 통한 기존대출 상환을 유도
- 대출 총량규제를 했다가 토지가격 급락을 가져온 일본 사례 답습 가능성<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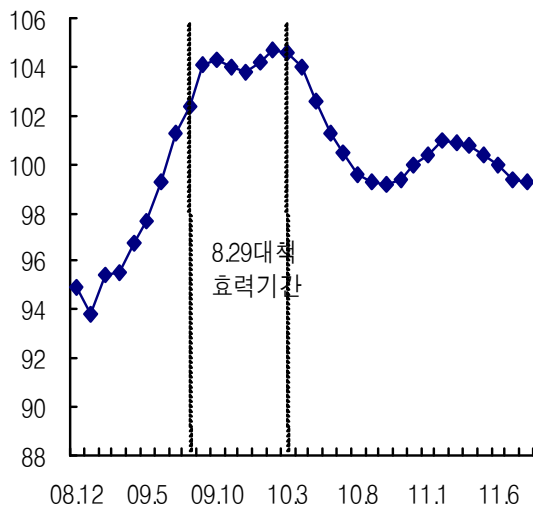
6)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토지가격이 1990년 3월 토지관련 용자에 대한 총량규제의 도입(부동산 관련 대출증가율은 자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원천적으로 봉쇄. 이후 가수요 매물이 순식간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토지가격은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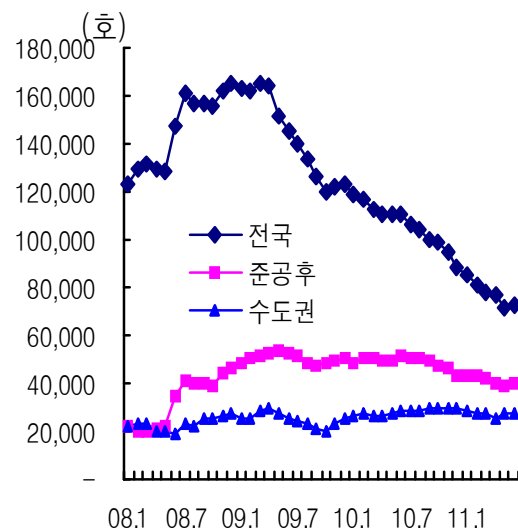
○ (자산가치 하락) 주택시장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국 미분양아파트의 감소 추세와 달리 수도권의 경우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이 지속
  -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준공 후' 미분양과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거의 그대로 남아있음
  
- 국내 주택버블이 일본의 부동산버블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이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을 장기 침체에 빠트리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현상의 가능성이 높음
  - KB 금융지주에서 발표하는 수도권 50 선도아파트 지수는 지난해 8.29 대책의 효력이 끝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
  -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 가치를 줄이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은 가격하락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가 다시 가격하락 상황을 초래하는 악순환 현상.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구입에 대한 실질 채무부담을 증가시켜 채무상환, 담보자산매각 등 가계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징)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KB선도아파트 50 지수 >



< 미분양아파트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3.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과 정책 과제

- 국내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잠재적 부실리스크가 우려
  -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저축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가계 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
    - 통계청의 가계 자산/부채 조사를 비교함으로써 금융위기 전(2006.5)과 후(2010.2)의 가계 재무상태(B/S<sup>7)</sup>)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sup>8)</sup>
    - 가계 순자산(자산-부채)은 2006년 2억 4,164만원에서 2010년 2억 3,005만원으로 평균 1,159만원 4.7% 감소
  -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순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 금융부채/금융자산(금융저축액+전월세보증금포함) 비율은 2006년 50.2%에서 2010년 49.5%로 소폭 하락한 반면 금융부채/금융저축액 비율은 2006년 63%에서 2010년 71%로 큰 폭 상승
    - 가계 재무구조 악화 추세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금융저축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판단

#### < 금융위기 전후 가계 재무상태 변화 >

(단위 : 만원, %)

	2006년		2010년	
총자산	28,112	(100.0)	27,268	(100.0)
○ 금융자산	○ 5,745	(20.4)	○ 5,828	(21.4)
· 저축액	· 4,570	(16.3)	· 4,089	(15.0)
· 전월세보증금	· 1,175	(4.1)	· 1,739	(6.4)
○ 부동산	○ 21,604	(76.8)	○ 20,661	(75.8)
○ 기타 자산(자동차, 회원권 등)	○ 764	(2.7)	○ 779	(2.7)
총부채	3,948	(100.0)	4,263	(100.0)
○ 금융부채	○ 2,881	(73.0)	○ 2,884	(67.6)
○ 임대보증금	○ 1,067	(27.0)	○ 1,380	(32.4)
순자산	24,164		23,005	

자료 : 통계청  
주 : ( )안은 구성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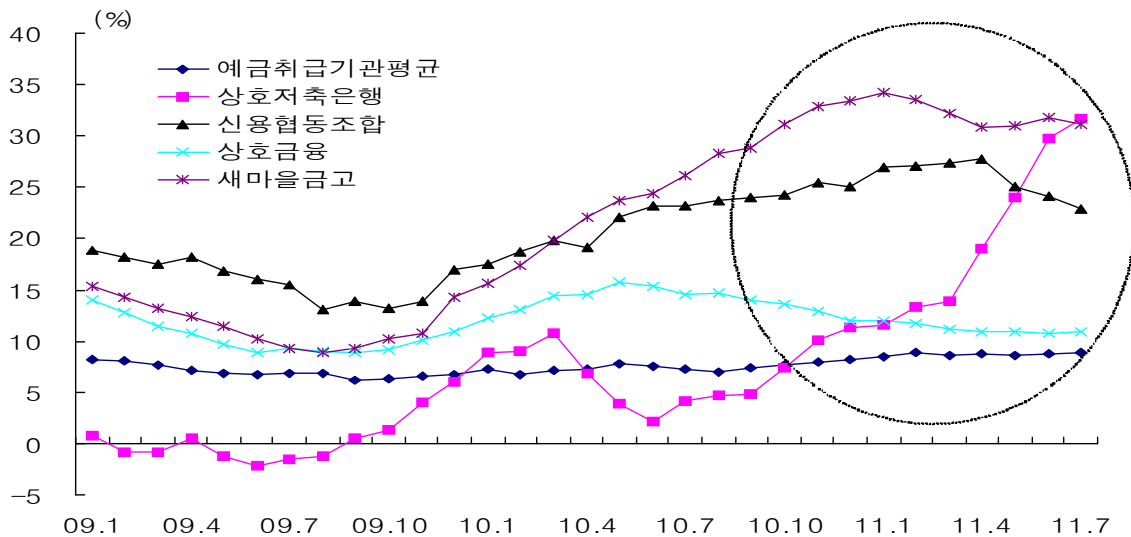
7) B/S는 Balance Sheet의 약자로서, '재무제표'를 의미.

8)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2011. 2)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참조

○ 한편 최근 저소득·저신용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은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sup>9)</sup>
- 금년 초부터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몰리는 대출쏠림 현상이 가속

< 非은행에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들 기관들에게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위험성을 내포
  -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非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부과되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최근 은행권의 자금공급 억제가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어 서민의 대출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9)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높은 변동금리 상품 비중과 낮은 원금상환 비율 등에서 미국 금융위기 당시 가계부채 부실화 사례와 유사

< 북구 3국의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 사례 >

- 북구 3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은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자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위기가 발생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을 경험함
- 북구 3국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품현상을 보인 가운데 부동산관련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는 대출 붐(lending boom)이 형성
  - 당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금리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가계대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2~3년 사이 20~30% 증가하는 대출 붐(lending boom)이 형성
  -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은 노르웨이(1988년 15%→1992년 20%), 스웨덴(1991년 7%→1993년 11%), 핀란드(1991년 21%→1993년 25%) 등으로 빠르게 상승

< 위기 이후 스칸디나비아 3국 금융기관의 여신 비중 추이 >

(단위: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988	1992	1991	1993	1991	1993
기업대출	80	77	84	75	59	58
가계대출	15	20	7	11	21	25
해외	-	-	5	9	14	12
기타	5	3	4	5	6	5

자료 : IMF "The Nordic Banking Crisis" Occasional paper 161, April 1998

-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
  - 1990년을 전후로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구 소련연방 붕괴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가 본격화
  - 부동산 거품 붕괴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산업이 부실화되는 한편 담보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
- 금융기관 부실화 심화에다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미숙,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과 경제정책 등으로 1990년도 초반 가계부채 발생 복합불황에 직면
  - 1990년 초반의 구소련 붕괴로 지리적으로 소련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핀란드의 경제위기가 심화(1990년에서 1993년 연속 4년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스웨덴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다소 일찍 위기를 겪은 노르웨이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기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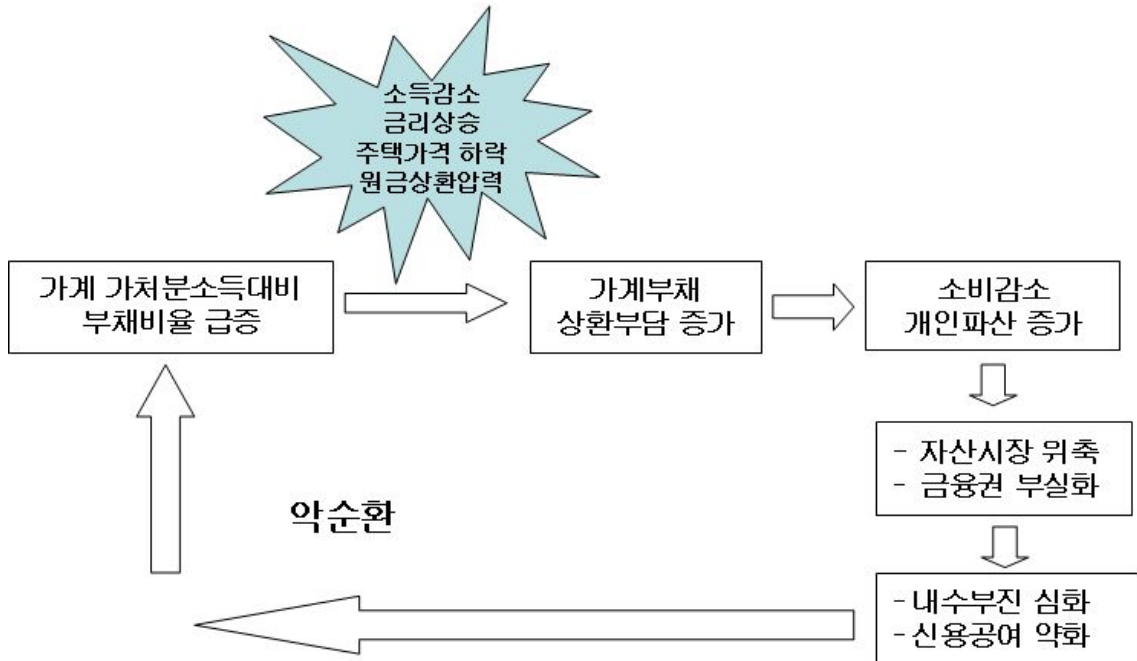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제2금융권이 촉발하는 북구 3국 유형 ‘가계부채發 복합불황’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국내 가계부채 수준도 과거 가계 부채 부실 국가의 부채수준을 상회
  - 2010년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
  - 북유럽 3국 중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은 노르웨이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987년 1/4분기146.6%에서 1988년 4/4분기에는 167.2%로 상승하고, 위기 직전 스웨덴의 경우 134%였음<sup>10),11)</sup>
-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가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
  -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가계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음
  - 체감경기 약화 및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가계 순자산가치 하락과 금융권의 상환압력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크게 증가
  - 가계 순자산가치가 빠르게 축소되고, 특히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가계의 경우 순자산이 負가 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저금리기조 포기 시 자칫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불황 국면에 빠지는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위기로 나타날 수 있음
  - 負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다시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 가계대출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단기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리상승 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특히 변동 금리 상품 비중 증가와 낮은 원금상환 비율 등에서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의 저신용자 촉발 가계부채 부실화 사례와 유사)
  - 저신용자 촉발 제2금융권 부실화가 그동안 경쟁적으로 가계 대출한 은행권 까지 확산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악순환될 가능성

10) 북구 3국의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수준은 일반적으로 복지비용 등 때문에 여타국보다 높은 수준

11) 금융연구원, "가계신용 증가의 경제적 영향", 2004

<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진행 과정 시나리오 >



○ (정책과제)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

- (정책당국)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미시·시장적으로 접근할 필요
  - 인위적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2금융권으로의 쏠림'을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
  - 제 2금융권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비자보호 규제를 도입<sup>12)</sup>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가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 바,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고용의 증가가 중요
  -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방안을 모색

12) 오바마 금융개혁안은 금융위기의 원인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급성장은 소비자의 금융지식 부족과 이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왜곡된 영업형태라고 지적하면서 모기지론에 대한 소비자보호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금융기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개인들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필요
  -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가계부채 회수를 할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지면서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 수립
  -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 유도
  
- **(가계)**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금융 책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금융지식 축적과 건전 소비생활 지향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02-2072-6216)